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명에 관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당시 나이와 실종 장소).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인식 하에 납치피해자의 인정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적인 귀국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1** 1977년 9월 19일  
우시쓰사건  
**구메 유타카씨**  
(52•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 우시쓰해안  
부근에서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경을 부인).




**2** 1977년 10월 21일  
여성 납치용의사안  
**마쓰모토 교코씨**  
(29•돗토리현)  
자택 부근의 손뜨개교실에  
간다고나간 후 실종.  
안부미확인 (북한은 입경을 부인).




**3** 1977년 11월 15일  
소녀 납치용의사안  
**요코타 메구미씨**  
(13•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학교 도중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자살' 로  
사망했다고 주장).



**4** 1978년 6월경  
전 음식점 종업원 납치용의사안  
**다나카 미노루씨**  
(28•효고현)  
유럽으로 출국한 뒤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경을 부인).



**5** 1978년 6월경  
리은혜 납치용의사안  
**다구치 아에코씨**  
(22•불명)  
안부 미확인 (북한은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고 주장).



**6** 1978년 7월 7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치무라 야스시씨**  
(23•후쿠이현)  
**치무라 후키에씨**  
(결혼전의 성:하마모토)  
(23• 후쿠이현)  
'돌아서 데이트하러 간다' 며  
외출한 후 실종.  
2002년 10월 귀국.




**7** 1978년 7월 31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하스이케 가오루씨**  
(20•니가타현)  
**하스이케 유키코씨**  
(결혼전의 성:오쿠도)  
(22•니가타현)  
하스이케씨는 '잠깐 나갔다  
금방 돌아오겠다'며 외출한 채  
실종. 마찬가지로 오쿠도씨도  
외출한 채 실종.  
2002년 10월 귀국.




**8** 1978년 8월 12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이치카와 슈이치씨**  
(23•가고시마현)  
**마스모토 루미코씨**  
(24•가고시마현)  
'바닷가에 석양을 보러 간다'며  
나간 채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심장마비로 사망  
(이치카와씨는 해수욕 중)  
했다고 주장).




**9** 1978년 8월 12일  
모녀 납치용의사안

**소가 히토미씨**  
(19·니가타현)

**소가 미요시씨**  
(46·니가타현)


‘둘이서 쇼핑하러 간다’며 나간 후 실종.  
히토미씨는 2002년 10월 귀국.  
미요시씨는 안부 미확인. (북한은 입경을 부인).




**11** 1980년 6월 중순  
신광수 사건

**하라 다다아키씨**  
(43·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 내에서 발생.  
안부 미확인 (북한은 ‘간경변’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10**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사안

**이시오카 도오루씨**  
(22·유럽)

**마쓰키 가오루씨**  
(26·유럽)


유럽 체재중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이시오카씨는 ‘가스사고로 사망’, 마쓰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고 주장).




**12** 1983년 7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사안

**아리모토 게이코씨**  
(23·유럽)

유럽에서 실종.  
안부 미확인 (북한은 ‘가스사고로 사망’ 했다고 주장).



■ 납치피해자의 실종 장소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 883명**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로 위의 17명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더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행방불명자 883명(2018년 10월 현재)에 관하여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조선적 납치피해자**

2007년 4월, 경찰은 1973년에 국내에서 실종된 조선적을 가진 어린 누나와 남동생(고경미씨, 고강씨) 실종사고를 북한에 의한 납치로 판단했다.

납치는 국적을 불문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원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과 이 사안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인정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납치피해자를 하루빨리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1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들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본 당국에 의한 수사 및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의해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 이래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완고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 9월의 제1차 일조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를 시인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5명의 납치 피해자가 24년만에 귀국했다.

그러나 나머지 안부가 불분명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2004년 5월의 제2차 일조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의 재개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북한에 남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오랜 세월을 걸쳐 북한에 잡혀있는 상태로 현재도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가족회)’가 결성되는 등, 피해자 구출을 촉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2018년 10월 현재까지 1,200만명을 넘는 서명을 총리대신에게 제출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 결성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중요

과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귀국한 5명을 포함한 1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이 밖에도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인 외(조선적)의 납치용의사안 및 소위 특정 실종자(주)를 포함하여,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 아래, 계속해서 납치피해자 인정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적인 귀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또,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범의 인도를 계속해서 요구한다. 또,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범의 인도를 계속해서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모든 납치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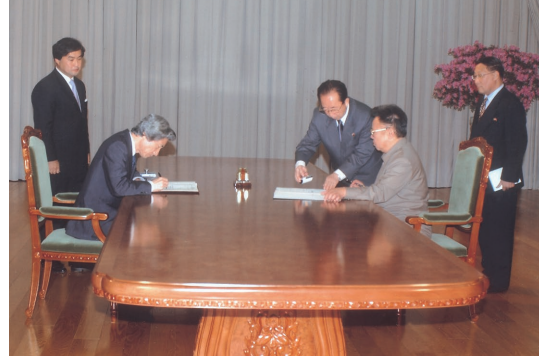
(주) 특정 실종자란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종자를 의미한다.



# 2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조 간의 교섭

## 1. 제 1 차 일조정상회담 (2002년 9월)

2002년 9월 17일에 열린 제 1 차 일조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부정해 왔던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사죄하였고, 당시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였던 13명 중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입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주). 또한, 일본 측이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소가 히토미씨에 대해서 납치를 시인하고 생존을 확인했다 (한편 북한 측은 그 후 조사에서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그의 모친인 소가 미요시씨에 대해서는 입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가족 면담 및 귀국 편의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차 일조정상회담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생존자의 귀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주) 북한은 치무라 야스시씨, 치무라 후키에씨, 하스이케 가오루씨, 하스이케 유키코 씨의 4명에 대해 생존함을 확인한 한편, 요코타 메구미씨, 다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이시오카 도오루씨, 마쓰키 가오루씨, 하라 다다아키씨 및 아리모토 게이코씨의 8명에 대해서는 사망하였음을, 구메 유타카씨에 대해서는 입북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03년 1월에 소가 미요시씨를, 2005년 4월에 다나카 미노루씨를, 2006년 11월에 마쓰모토 교코씨를 정부인정 납치피해자로 인정했다.

## 2. 사실조사팀 파견 (2002년 9월~10월)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일본 정부가 파견한 사실조사팀이 생존자와 면담하고, 안부 미확인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처음부터 제한적인 데다 내용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심스러운 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마쓰키 가오루씨라고 하며 제출된 ‘유골’은 법의학적인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해 10월 29일 및 30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일조국교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150개 항목에 걸친 의문점을 지적하고 더 많은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은 없었다.



24년만에 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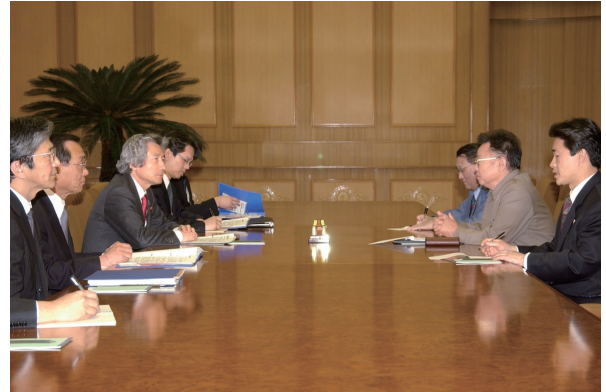
### 3. 납치피해자 5명 귀국 (2002년 10월)

2002년 10월 15일 납치피해자 5명 (치무라 야스시씨·치무라 후키에씨, 하스이케 가오루씨·하스이케 유키코씨, 소가 히토미씨)이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했다.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의 납치피해자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5명의 납치피해자가 계속 일본에 남도록 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 및 조속한 귀국 일정 확정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4. 제 2 차 일조정상회담 (2004년 5월)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당시)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조간의 문제와 핵, 미사일과 같은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두 정상 간에 합의되었다.



제2차 일조정상회담

- 북한 측은 치무라씨의 가족과 하스이케씨의 가족 총 5명이 이 날 일본에 귀국하는 데 동의한다.
- 안부 불명의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즉시 진상 규명 조사를 백지상태에서 재개한다.

본 합의에 따라 치무라씨 가족과 하스이케 씨 가족 총 5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다. 또한, 소가 히토미씨의 가족 3명은 그 후 7월 18일에 귀국·방일이 실현되었다.

### 5. 일조실무자협의 (2004년 8월 및 9월: 베이징, 같은 해 11월 평양)

(가) 2004년 8월 (제1차) 및 9월(제2차)에 걸쳐서 일조실무자협회가 열렸으며 북한 측은 안부불명자에 관한 재조사의 중간결과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및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나) 2004년 11월의 제3차 협의는 50여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북한 측의 ‘조사위원회’와의 질의응답 이외에 총 16명의 ‘증인’들로부터의 직접 청취와 납치 관련시설 등에 대한 현지시찰,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하는 것 등의 물적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협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특정 실종자 등)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 5명의 이름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해당 5명에 대해 입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일본 정부는 그 후의 협의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다) 일본 정부는 제3차 협의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정보 및 물적 증거를 곧바로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8명은 사망, 2명은 입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주)”는 북한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 및 물적 증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고,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씨와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북한 측에 제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주) 구메 유타카씨 및 소가 미요시씨의 2명을 가리킨다.

## **6. 일조포괄병행협약 (2006년 2월: 베이징)**

2006년 2월의 일조포괄병행협약에서 총 11시간에 걸쳐 납치문제에 관한 협의를 이루어졌으며, 일본 측은 거듭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피의자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종래와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다. 또한,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안부불명자의 재조사를 계속할 것조차도 약속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도도 거부했다.

## **7.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2007년 3월: 하노이, 같은 해 9월: 올란바토르)**

2007년 2월의 6자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제1차 회담이 같은 해 3월에 개최되었다. 일본은 모든 납치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의 인도를 거듭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 9월의 제2차 회담에서도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 **8. 일조실무자협약 (2008년 6월: 베이징, 같은 해 8월: 심양)**

(가) 2008년 6월의 일조실무자협약에서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의 인도를 거듭 요구하고, 북한 측이 납치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도 현재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며 북한 측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 결과, 북한 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같은 해 8월에는, 6월 협약에서 양측이 표명한 조치, 특히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북한 측이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납치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존자 발견과 귀국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일본 측도 인적 왕래의 규제를 해제하고 항공기 전세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 그러나 2008년 9월 4일 북한측으로부터 지난 일조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갑작스러운 일본 정권 교체(주:당시 후쿠다 총리의 사임)로 신정권의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할 때까지 조사 개시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

## 9. 일조정부간협약 (2012년 11월:울란바토르)

2012년 11월, 4년만에 북한과의 협의인 일조 정부간 협약이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지금까지의 경위와 서로의 생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약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측은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 제기하고 논의를 했다.

제2차 협의는 12월 5일과 6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달 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10. 일조 정부간 협의 (2014년 3월:베이징)

2014년 3월 3일과 같은 달 19일 및 20일에 심양에서 개최된 일조적십자회담의 기회를 이용하여 1년 4개월만에 일조 정부간(과장급)에 비공식의 의견교환을 실시하였으며 정부간 협의 재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3월 30일 및 31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간 협의에서는 양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제반 현안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솔직한 논의를 하였고 향후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측의 기본적 생각에 관해 문제제기했다.

## 11. 일조 정부간 협의 (2014년 5월:스톡홀름)

2014년 5월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 간 협의에서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로 약속했다(스톡홀름 합의). 일본 측도 북한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탕으로 하여 북한 측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 12. 일조 정부간 협의 (2014년 7월:베이징)

2014년 7월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간 협의에서는 북한측으로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일본측으로부터는 이 위원회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7월 4일, 북한 측은 국영 언론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구성,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일본측의 이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내외에 공표하였고,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측은 인적왕래의 규제조치와 지불보고 및 지불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일조정부간협약 (2014년 7월)



### 13. 일조 외교 당국간 회담 (2014년 9월:심양)

2014년 9월 29일, 북한으로부터 조사 현황에 관한 설명을 보고받기 위해 일조 외교 당국간 회담을 개최했다. 본 회담에서 북한측은 현 단계에서는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는 없지만, 일본측이 평양을 방문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과 면담하면 조사의 현황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4.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 (2014년 10월:평양)

2014년 10월에 평양에서 열린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일본측은 납치문제가 최우선과제라는 것,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즉각적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과 납치실행법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인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납치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속히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거듭 전달했다. 또,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하루빨리 통보하도록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측으로부터는 위원회 및 지부의 구성과 같은 체제에 대해, 그리고 증인이나 물증을 중시한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조사결과에 구애받는 일 없이 새로운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해 간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경의 유무, 경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체재했던 초대소의 흔적 등 관련 장소를 재차 조사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증·증인 등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 15.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선언 (2016년 2월)

북한이 2016년 1월에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등에 따라, 같은 달에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일본은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여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음을 전했고, 북한이 이 합의에 따라 하루빨리 모든 납치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16. 최근의 움직임

최근에도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반복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해왔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장에서 아베 총리는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거론하여 일본 측 입장을 전했다. 특히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포함해 납치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 3 국제사회의 동향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북한측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들로부터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일본 정부는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이용해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는 한국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피해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인 납치피해자 등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납치문제는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이다.

## 1. 국제연합

(가) 유엔에서 일본은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북한인권상황결의를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양쪽에 제출해 왔고, 인권이사회에서는 11년 연속 11번, 유엔총회에서는 13년 연속 13번 채택되었다(2018년 10월 현재).

(나) 2013년 3월의 인권이사회에서 새로 북한인권 관련 유엔조사위원회(COI)의 설치를 포함한 결의가 무투표로 채택되었다. 유엔조사위원회(COI)는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태국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2014년 2월에 최종보고서(COI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다) 2014년 3월의 인권이사회에서 COI보고서 내용을 반영하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한 내용의 결의가 찬성다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최대한의 표현으로 비난하였고,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수단을 조속히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COI보고서의 권고를 토대로 안보리가 인권침해의 책임자가 설명책임을 다하도록 적절한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에 위탁할 것을 검토하는 것과 COI보고서의 후속조치를 잘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일반 토론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 (2018년 9월)



- (라) 201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과거 최다수의 국가가 공동제안국이 되었고 COI 보고서 및 같은 해 3월의 인권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하며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상황결의보다도 강한 내용의 결의가 찬성 다수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조직적이면서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언급하였고, 나아가 안보리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위탁할 것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 (마) 그 후, 북한인권상황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 사무소 설립(2015년 6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설명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가의 지명(2016년 9월),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OHCHR의 능력 강화 결정(2017년 3월)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3월에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상황결의에서도 OHCHR의 능력 강화 프로세스의 가속화가 요구되고 있다.
- (바) 유엔 안보리에서도 2014년 12월에 인권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이후, ‘북한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담을 4년 연속 개최하였고, 일본은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다.

## 2.6 자회담

일본은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6자회담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성과문서에서는,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설치 결정되고, 10월 성과문서에서는 일조 양측이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조기 국교정상화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 또한, 이를 위해 일조 양측이 정력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언급한 ‘현안사항’에 납치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6자회담 (2007년 9월)

### 3. 다자간 협의

일본 정부는 G7정상회담, ASEAN 관련 정상회담 등 다자간 협의에 있어서도 납치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여러 국가로부터 명확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G7 샤를부아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의 즉시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고, G7정상들의 지지를 얻어 성명에도 명확히 포함되었다. 또한,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아베 총리가 일반토론연설 등을 통해 모든 납치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각국에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G7 샤를부아 정상회담 (2018년 6월)



일중한 정상회담 (2018년 5월)



일한미 외무장관회담 (2018년 7월)

### 4. 양자 회담

일본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과의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각국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일 당시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해, 가족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아베 총리와 납치문제해결을 위해 일본과 미국은 앞으로도 협력해 나간다는



일미 정상회담 (2018년 4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납치문제를 제기한 외에도 미국은 폼페이오 미국무장관 방북 시를 비롯해 여러 기회를 통해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북한에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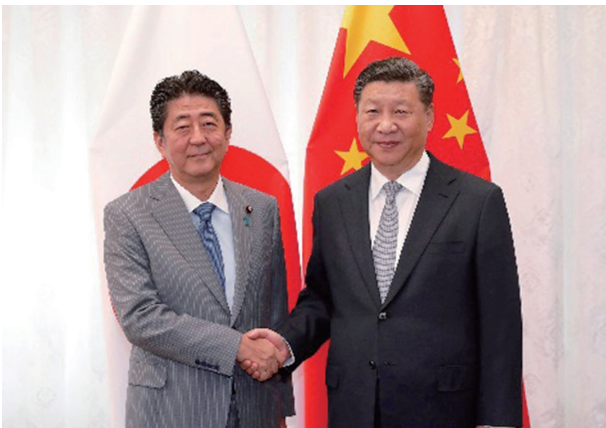
또한 2018년 5월 일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에게 지지와 협력을 요청해, 양 정상의 이해를 얻은 결과 성과문서에 납치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2018년 9월 일러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여 푸틴 대통령의 이해를 얻었으며, 같은 달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납치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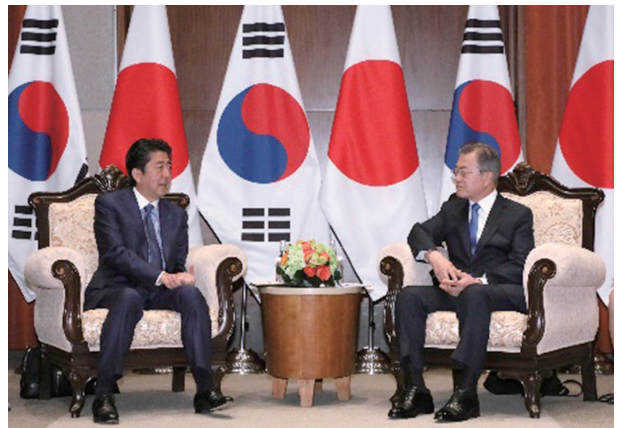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과 납치피해자 가족의 면담 (2017년 11월)



일러 정상회담 (2018년 9월)



일중 정상회담 (2018년 9월)



일한 정상회담 (2018년 9월)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에 관한 결의안**

미국에서는 2016년 9월에 미국 의회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에 관해 미국 정부가 일본, 중국 및 한국 정부와 연계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2017년 3월에는 같은 내용 결의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 제출되어 2018년 2월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의회의 동향을 주시할 생각이다.

# 4 일본 국내에서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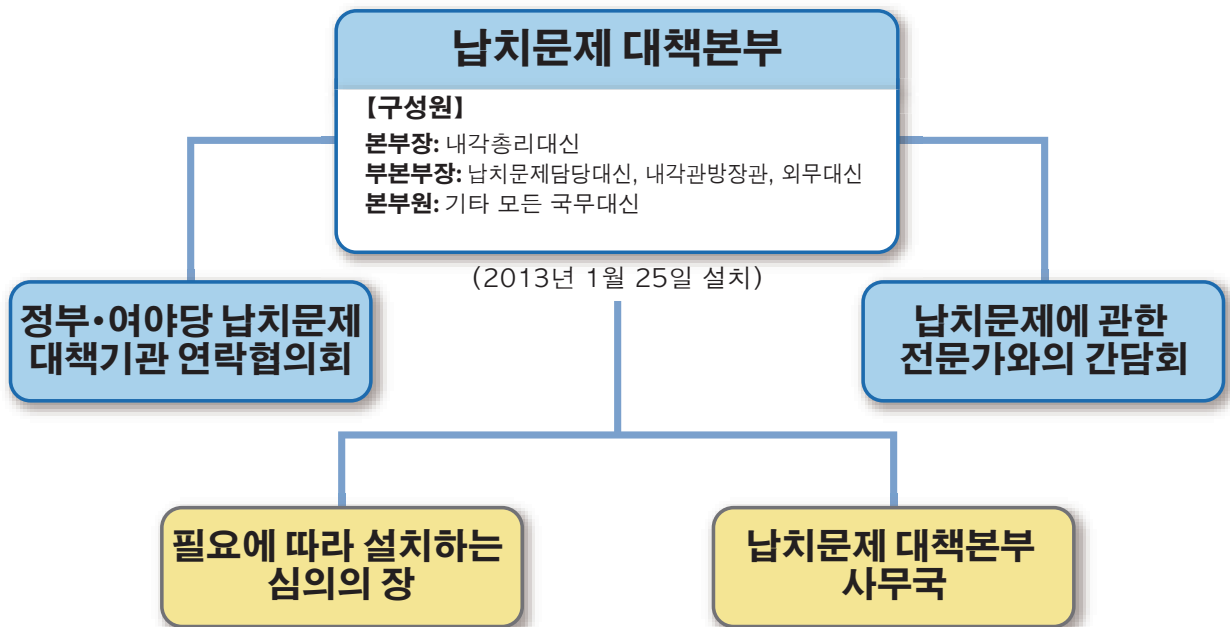
## 1.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 등

2013년 1월,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과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본 대책본부는 총리대신이 본부장을 맡고 납치문제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및 외무대신이 부분부장을 맡고 있으며, 각 장관들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장,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공조하며 각각의 책임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납치문제대책본부 제1차 회담 (2013년 1월)

또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당 납치문제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1. 방침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로서는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납치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적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또한,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간다.

## 2. 구체적 시책

위와 같은 방침하에 각 각료는 본부장,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아래 8개 항목에 관하여 각각의 책임분야에서 전력을 다한다.

- ① 조기 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법 제도하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 ② 일조 정부 간 협의를 비롯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 측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 ③ 납치피해자 및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한다.
- ④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수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치실행범에 관한 국제수사를 포함한 수사 등을 지속한다.
- ⑤ 납치문제가 결코 퇴색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교육현장을 포함한 국내지역 각층 및 각종 국제적인 장소 내의 다양한 장을 활용하여 국내외 여론 계발을 한층 강화한다.
- ⑥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유엔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한다.
- ⑦ 납치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세심한 대응, 귀국한 납치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향후 납치피해자 귀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 ⑧ 그 밖에 납치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 시책’ 2013년 1월 25일 납치문제 대책본부 결정)



스가 납치문제담당대신과 납치피해자 가족의 면담  
(2018년 10월)

## 2. 일본 정부에 의한 수사·조사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안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귀국한 납치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협력을 얻으면서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조사 결과, 지금까지 12건 17명을 일본인 납치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조선적을 가진 남매가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사안 1건(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용의사안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공무원 등 납치에 관여한 11명에 대해 체포장을 발부하여 국제 수배를 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의 수사·조사에 대해서는 2013년 3월경찰청 외사과에 설치된 ‘특별지도반’이 도도부현 경찰을 대상으로 지도·조정하고,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DNA 감정자료 채취,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 인터넷 사이트에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 대처를 강화하여 진상 해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난 사안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과 해상보안청이 공조를 강화하여, 수사·조사를 하고 있다.

### ■ 납치용의사안과 관계된 국제수배 피의자

사안 (사건) 명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사안 ⑫	우쓰쓰사건 ①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후쿠 이) ⑥ / 신광수사건 ⑪	신광수사건 ⑪	모녀 납치용의사안 ⑤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니가타) ⑦
피의자	우오모토 기미히로 (이전의 성:아베)	김세호	신광수	김길욱	통칭 김명숙	통칭 최순철
						

사안 (사건) 명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니가타) ⑦		남매 납치용의사안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사안 ⑩	
피의자	통칭 한금녕	통칭 김남진	홍수혜 (일본명 기노시타 요코)	모리 준코	와카바야시 사키코 (이전의 성: 구로다)
					

## 3. 납치문제에 관한 주된 홍보 및 이해촉진 활동

2006년 6월,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납치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납치문제 등의 실태를 해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납치문제 등의 계몽을 꾀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12월 10일~16일)의 지정 및

계몽주간 동안 국가·지자체의 계몽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소책자와 포스터 배포를 비롯하여 납치문제 계몽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 각종 연수회에 대한 강사 파견, 대북 라디오 방송(일본어·한국어), 납치문제 계몽의 무대예술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 동안 정부와 NGO는 여러 회의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일본 국내외에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메구미'



납치문제 계몽포스터를 전국에 배부



#### 4. 대북 조치

2006년 7월 5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그 후 북한은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2012년 4월, 같은 해 12월에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에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2010년 3월에 북한은 한국 해군 초계함에 어뢰공격을 했다. 이들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 및 단호한 비난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유엔안보리결의에 의거한 대북제재조치와 함께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 요청, 북한적을 갖는 사람에 대한 입국의 원칙금지,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과의 수출입금지 등의 대북조치를 취해 왔다.

2014년 5월의 일조합의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일본 측은 인적왕래의 규제조치와 지불보고 및 지불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인도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2016년 1월의 핵실험 및 2월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같은 해 2월 인적 왕래의 규제조치, 지불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 대북 지불의 원칙적인 금지조치, 인도 목적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 및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금지조치, 그리고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 의거해 유엔 안보리 결정 등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입항금지조치와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추가 지정 등의 대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 9월, 북한이 그해의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같은 해에 20발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 그리고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모든 납치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에 인적 왕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기항한 일본 선박의 입항금지조치 및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 의거해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확대조치 등을 실시했다.

나아가 북한은 2017년에도 3발의 ICBM 급을 포함한 1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같은 해 9월에는 과거 최대 출력으로 추정되는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같은 해 6월, 8월, 9월 및 12월에 유엔안보리결의 제 2356호, 제 2371호, 제 2375호 및 제 2397호가 각각 채택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자산 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확대조치 등을 실시한 외, 일본의 독자적인 조치로 같은 해 7월, 8월, 11월 및 12월에 자산동결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했다.

# 5 납치된 13세 소녀 요코타 메구미씨

■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7년 11월 15일 일본해에 면한 니가타의 어떤 마을에서 한 소녀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날 아침 요코타 메구미씨는 평소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 쌍둥이 남동생과 시골벽적하게 아침밥을 먹은 후, 중학교를 향해 집을 나섰다. 이것이 가족들이 메구미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 메구미씨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날 저녁, 동아리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메구미씨는 평소 집에 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되어 혼신을 다해 메구미씨를 찾았습니다. 경찰도 유괴, 사고, 가출, 자살 등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물론 유류품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 그 날 밤, 메구미씨는 —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신을 다해 메구미씨를 찾고 있었을 때, 메구미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어 40시간 동안이나 북한으로 가는 배 안의 킴킴하고 추운 선창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메구미씨는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출입구와 벽 등을 긁었고, 북한에 도착했을 때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 밝고 건강한 메구미씨

메구미씨는 밝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아했고, 서예와 클래식발레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메구미씨가 사라지기 전날인 11월 14일은 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메구미씨는 아버지에게 머리빗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멋 좀 부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 가족들의 슬픈 나날

메구미씨가 없어진 날부터 가족들의 생활은 일변했습니다. 시골벽적했던 식탁은 불이 꺼진 듯이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집을 나서서 해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집안일을 마치면 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보았고, 메구미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안을 몇 킬로씩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족들이 모르게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처지가 되어야 했는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

## ■ 그리고 20년 후, 1997년 1월 21일 —

### 메구미씨가 살아 있다!

메구미씨가 평양에 살아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게루씨와 어머니 사키에씨는 ‘요코타 메구미’라는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가 일제히 보도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 일조정상회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당시)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게루씨도 사키에씨도 이제 드디어 메구미씨를 만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치를 시인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는 ‘요코타 메구미 사망’ (5명 생존, 8명 사망, 2명 미입경)이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 납득이 가지 않는 북한의 설명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북한은 메구미씨의 ‘유골’을 제출했으나, 감정 결과 그 일부는 메구미씨와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되찾을 때까지!

메구미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은 소중한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그 가족들도 깊은 슬픔 속에서 지금도 소중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국가주권의 침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를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키에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면 큰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북한에서는 도청기나 몰래카메라 등에 신경쓰면서 조심하며 생활을 했을 것이므로 홋카이도의 목장 같은 곳에서 대자로 누워 ‘자유다 —!’ 하고 외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메구미씨는 북한에 납치된 채입니다.



# 6 납치문제 Q&A

## Q1 납치문제란 무엇입니까?

**A1**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은 많은 일본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납치=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데려가는 것)  
북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인 납치를 부정했지만 2002년 9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이 고이즈미 총리(당시)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된 일본인 중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5명뿐입니다.  
5명 이외의 납치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에 조속히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Q2 북한은 왜 일본인을 납치한 겁니까?

**A2** 납치에 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납치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를 한 배경에는 공작원 신분의 일본인으로의 위장, 공작원의 일본인 행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에의 이용,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요도호' 그룹(주)에 의한 인재 획득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통칭 '요도호')을 공중 납치한 범인과 그 가족 등의 총칭.

## Q3 북한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인가요?

**A3** 지금까지 북한은 납치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으로 귀국시켰고 남은 납치피해자들은 '사망' 또는 '북한에 입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치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망'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극히 부자연스럽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의 일조 정부 간 협의에 따른 합의에서 북한 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으나'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납치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스톱홀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Q4 일본인 납치피해자가 몇 명이 있나요?

**A4**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17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이미 귀국했지만 남은 12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적 유아 2명이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정부는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행방불명자 883명(2018년 10월 1일 현재)에 관하여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Q5 북한은 납치를 인정했는데, 왜 아직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A5** 납치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써 간첩 활동 등 북한에 불리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김현희 북한 전 공작원은 1987년 11월,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한국의 항공기를 폭파했습니다. 김현희 전 공작원은 납치피해자(다구치 야에코 씨)로부터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구치 씨를 귀국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 Q6 어떻게 되면 납치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A6**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바로 귀국시킬 것.
- ② 북한이 납치피해자의 진상을 밝힐 것.
- ③ 북한이 납치를 실행한 자를 일본에 인도할 것.

## Q7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7** 일본은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대북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하여 각국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Q8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어떤 교섭 방침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A8**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은 일조평양선언에 준하여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각종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한에 스톱홀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고자 합니다.

## Q9 납치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9** 2014년 2월에 발표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사안 피해자의 출신 국가가 일본 외에도 한국, 레바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는 피해자가 있는 국가의 여부를 떠나 국제적으로 추궁해야 할 인권문제이며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상기 COI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결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고,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상황결의가 채택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Q10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될까요?

**A10** 이제까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1,200만명을 넘는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납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피해자를 되찾겠다는 강한 결의가 표명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커다란 힘이 됩니다.

# 납치문제에 관한 동향 ( 연표 )

1977년	
1978년	
1980년	
1983년	
1991년~	
1997년	3월
1998년	8월
2002년	9월
	10월
	12월
2003년	8월
2004년	5월
	11월
2005년	9월
	12월
2006년	2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2007년	3월
	9월
2008년	6월
	8월
	9월
2009년	4월
	5월
	6월
	10월
2010년	3월
	5월
	11월
2011년	12월
2012년	4월
	11월
	12월
2013년	1월

납치 사안의 발생(2, 3 페이지 1 2 3)  
 납치 사안의 발생(2, 3 페이지 4 5 6 7 8 9)  
 납치 사안의 발생(2, 3 페이지 10 11)  
 납치 사안의 발생(2, 3 페이지 12)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납치문제를 제기. 북한은 완강히 부인.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 결성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제1차 일조정상회담(평양). 일조평양선언에 서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죄.  
 진상조사팀 파견  
 납치피해자 5명 귀국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6자회담 제1차 회담  
 제2회 일조 정상회담(평양)  
 북한에 남아있던, 2002년 10월에 귀국한 납치피해자의 가족 5명이 귀국.  
 안부를 알 수 없는 납치피해자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곧바로 '백지' 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재개하기로 약속. 소가 히토미씨 일가가 자카르타에서 재회, 일본에 귀국(7월).  
 제3회 일조 실무자협의(평양)  
 북한이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인도한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씨의 것과는 다른 DNA를 검출. 북한에 강력히 항의.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일조 포괄병행협의(베이징)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면담  
 '납치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통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7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채택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채택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1회 회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결정  
 제1회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하노이)  
 제1회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울란바토르)  
 일조 실무자협의(베이징)  
 납치문제에 관한 재조사에 합의  
 일조 실무자협의(선양)  
 납치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의 구체적인 형태 등에 합의  
 북한으로부터 조사 개시를 보류한다는 연락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7월까지 8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북한이 핵실험 실시(두 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채택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2006년에 설치한 구 대책본부는 폐지)  
 북한, 한국 초계함(천안)호에 어뢰 공격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북한, 한국 연평도 포격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12월까지 2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  
 일조 정부 간 협의(울란바토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 채택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2009년에 설치한 구 대책본부는 폐지)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1회 회의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 시책' 결정

2014년	2월	북한이 핵실험 실시(세 번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정
	8월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COI)가 아베 총리대신 예방
	3월	요코타 메구미씨 부모와 김은경(메구미씨 딸) 면회(울란바토르)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정식 제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7월까지 11발) 일조 정부간 협의(베이징)
	4월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면담
2015년	5월	제2회 북일 정상회담 10주년 기념 후루야 납치문제담당대신 담화 발표 일조 정부간 협의(스톡홀름)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실시를 약속
	7월	일조 정부간 협의(베이징)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은 대북조치를 일부 해제
	9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10월	북일 외교 당국간 협의(선양)
	12월	특별조사위원회와 협의(평양)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
2016년	3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발)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지 사무소 개설(서울)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개최(제네바)
2017년	1월	북한이 핵실험 실시(네 번째)
	2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10월까지 23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1월에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등에 대응해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조치를 발표한 후, 북한은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6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취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 채택
	12월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개최(뉴욕)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2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11월까지 17발)
	6월	유엔안보리결의 제2356호 채택
	7월	일본의 독자적 대북 조치 발표
	8월	유엔안보리결의 제2371호 채택 일본의 독자적 대북 조치 발표
9월	북한이 핵실험 실시(6번째) 유엔안보리결의 제2375호 채택	
2018년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반 토론회연설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 납치피해자 가족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일본의 독자적 대북 조치 발표
	12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 일본의 독자적 대북 조치 발표 ‘북한의 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4년 연속 4번째)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결의’ 채택(13년 연속 13번째)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 채택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결의’ 채택 (11년 연속 11번째)
	4월	남북정상회담(판문점)
	5월	남북정상회담(판문점)
	6월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9월	남북정상회담(평양)



2002에 납치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한 명의 귀국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통절한 마음과 '이제는 잠시도 주저할 틈이 없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는 아베 내각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납치문제대책본부의 부분부장으로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담당대신으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담당대신 취임에 즈음하여 아베 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 재팬 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면서 그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내각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대신

**스가 요시히데**

2018년 10월

납치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납치문제

Q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rachi.go.jp>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납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문의 및 자료를 청구하실 분들은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 이메일 주소 >>> [g.rachi@cas.go.jp](mailto:g.rachi@cas.go.jp)

◆ FAX >>> +81-(0)3-3581-6011

문의처

**내각관방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

(우) 100-8968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6-1  
TEL +81-(0)3-3581-8898 FAX +81-(0)3-3581-6011  
<http://www.rachi.go.jp/>

**외무성**

(우) 100-891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TEL 03-3580-3311  
<http://www.mofa.go.jp/mofaj/>

2018년 10월 발행

사진제공: 내각홍보실, 주식회사 지지통신사, AFP=지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